

# 윤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 2학기부터 적용” 지시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교권 확립 안되면 학생 인권 공허”  
홍약범죄 신속 수사·강력 처벌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

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 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홍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몸치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법 불발에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로 여야 선거법 개정안 이달 처리도 ‘난망’

1일부터 금지 조항 효력 없어

광주시 게시 방지 조례 개정 나서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입지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각종 현수막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여야 지도부는 뒤늦게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이견 해소가 변수로 남아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각기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기

도 했다. 정치권에선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정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입법 및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물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현수막까지 난립하고 있다. 특히,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및 지역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현수막들을 내걸면서 민심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당정치론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지역 민심을 겨냥, 폭우와 폭염에 건강 챙기라는 친절한 현수막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공해’ 수준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규제조항을 강화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30m 안에 설치된 현수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 현수막은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고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은 즉시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정부 “오염수 한일 추가 실무협의 이번주 내에 진행될 것”

“이재명 대표 서한, 파악한 것 없어”

정부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 후속 조치와 관련, “이번 주 안에는 일본 측과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추가 협의의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장은 “이번 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제안한 상테고 일본 측에서 곧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

과학외교국장은 “일본 측과 적극적으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복합산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실무협의를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으로,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다.

당시 양측은 6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초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협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요구 사안에 대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 이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는) 사안,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며 “앞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열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선 “정부에서 직접 얘기를 듣거나 파악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부, ‘북·러 무기거래’ 독자제재 나설까

“사실관계 등 종합 검토해 판단”

정부는 1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황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는지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필요한 자체 정보뿐 아니라 유관 기관 동향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과는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는 등 관련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한편 임수석 대변인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대해 “주민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재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